

북미회담 앞둔 北, 핵실험장 폐쇄... '韓 비핵화' 잔걸음

(풍계리)

北, '23~25일 폐쇄' 공식 발표
韓·美 등 5개국 기자단에 공개

美 트럼프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
靑 "북미 지도자 믿음 두터워질 것"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을 빠르게 내딛고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반도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고 체제 보장을 위한 핵심 열쇠인 '비핵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첫번째 조치로 북한은 이달 23~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지난 12일 공식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6월 12일 큰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달에 핵실험장을 폐기(dismantle)하겠다고 발표했다. 생큐"라면서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우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북측이)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3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두터워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의 발표를 인용해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며 "핵실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를 폭발의 방법으로 봉쇄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실험장 폐쇄에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국제기자단에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여러 나라의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면서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내마이트 소리가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 북한의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도 폭파 일정 등에 대해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들도 나오던데, 풍계리 4개 갱도를 모두 폭파하고 막아버린 뒤 인력을 다 철수

시키다는 것은 최소한 미래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4개 갱도 가운데 1번과 2번은 각각 1번·5번씩 핵실험을 하고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3번 갱도는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4번 갱도 역시 최근까지 굴착공사를 하며 핵실험장으로 사용하려 한 것 아닌가"라면서 "핵을 더 소형화하고 성능을 고도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려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실험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이어 최근에 PVID(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는 'CVID'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CVID를 성취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 후

린 트위터 글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논의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PVID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일 취임식 인사말에서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던 말이다. PVID는 CVID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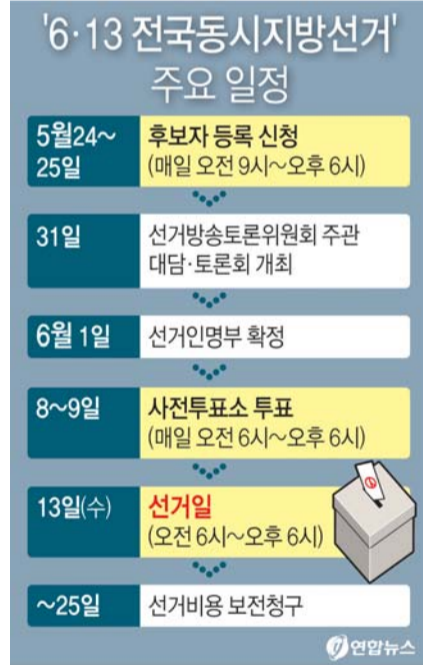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PVID'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나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처럼 여러 단계로 쪼개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PVID가) 무슨 의미인지는 꽤 분명하다. 우리가 과거에 처했던 것과 똑같은 지점으로 귀결되지는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행동을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PVID라는 개념의 경우 그야말로 완전하고 돌아킬 수 없는 해결을 원한다는 뜻에서 '영구적인'이라고 쓴 게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라며 PVID와 CVID 사이에 유의미한 뜻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지방선거 D-30 | 한반도 평화·드루킹 주요 변수

文 정부 첫 심판대
與, 지지율 고공행진에 초반우세
野, 경제 이슈 앞세워 견제 호소
결과따라 정계개편 가능성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13일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가 일제히 실시된다. 전국적으로 824명의 광역의원과 2927명의 기초의원도 새롭게 선출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난 1년을 평가받는 첫 심판대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여소야대의 한계로 개혁작업에 번번이 발목을 잡힌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지지를 받아 역점 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현 여권에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승패 가를 주요 변수

지방선거를 강타할 주요 변수로는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 한반도 평화 무드, '드루킹 특검', 투표율, 민생·경제 등이 꼽힌다. 문 정부에 대한 지지율 흐름 역시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메가톤급 변수는 단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이슈다. 전문가들은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지방선거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여부도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때 드루킹 특검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은 야권이 드루킹 특검을 '대선 불복 특검'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판단하고선 즉각 국회 협상 결렬을 선언, 특검 불가론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드루킹 특검이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 역시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7회 지방선거 역시 지난 5회(54.5%), 6회(56.8%)와 마찬가지로 50% 중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각종 선거 때마다 표심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민생·경제 문제 역시 변수로 꼽힌다.

◆PK·수도권이 승부 가른다

6·13 지방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PK(부산·경남) 혈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대 격전지 PK에서 명운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PK 탈환에, 한국당은 PK 수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당은 23년 전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PK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리는 등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PK를 내주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감 아래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한국당이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은 정권교체 이후 민심의 동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선거도 관전 포인트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수도권 쟁탈전이야말로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만하다. 한국당은 경기와 인천을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다. 두 곳 다 그동안 보수세력이 주로 승기를 잡아온 지역이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수도권 3개 지역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특정 정당이 수도권을 석권한 사례로 남게 된다.

◆선거 이후 정치권 빅뱅 오나

6·13 지방선거는 여의도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개편을 포함한 정치권 빅뱅까지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문 정부는 변화를 앞세운 각종 국정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국정 동력을 얻게 된다. 반대로 민주당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경남은 물론, 수도권 등 전략 지역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경우 지도부 책임론을 포함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의 정계개편은 여권보다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공언대로 17개 광역단체 중 6곳 이상에서 승리하고, 바른미래당이 존재감을 보이지 못할 경우 한국당이 야권 정계개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종합=이범중 기자 jaker@

의원 4명 사직서 오늘 처리 '국회 정상화' 분수령 될까

민주·민평·정의당 "본회의 참석"
한국·바른미래 "합의없는 본회의"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 양승조(충남 천안), 박남춘(인천 남동구 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의 4명의 사직서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들 지역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이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소집'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드루킹 특검' 등 쟁점 현안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로 지난 9일 이후 나흘간 협상을 중단한 여야가 14일 본회의 개의 문제를 고리로 13일 협상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특히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상화 해법을 밝히고, 단식 농성을 끝내고 병원에 입원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권이 드루킹 특검을 대선 불복 특검으로 몰고 가면서 새 원내지도부는 윤신의 폭이 전임 지도부보다 좁아진 상황"이라면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14일 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의원 사직서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사직서 안건을 한데 묶은 '패키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약 여야가 협상하지 않거나 협상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 의장이 14일 본회의 소집을 강행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서 안건이 처리하려면 147석(재적 과반)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로 최대 149석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이미 무소속 의원들과도 접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직서 처리를 강행한다면 5월 국회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밤 9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를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본회의 개의를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